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 2021.11. 1.

(관리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구성원(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의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방이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4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경기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5. “소방본부등”이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서 및 소방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도지사와 소속 구성원 및 도지사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2차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소속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 해야 한다.
-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상급자와 행위자를 포함한 소속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인권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소방본부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사, 구제 등의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임 인권보호관을 성평등옴부즈만이라 하고,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접수신청서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을 비치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이를 소속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한다.

제9조(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체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고위직 관리자(도지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로 임용한 사람에게는 임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인권담당부서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교육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인권담당부서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의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지사가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접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접수 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도지사가 의뢰한 사항 또는 사안이 중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사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등이 접수한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피신청인)와 다를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신고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단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고충상담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하기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⑩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고충상담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사건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는 고충상담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창구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도지사(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들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可用資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내버려 두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어긋나는 불리한 처우

③ 도지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휴가 부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도지사, 소속 부서의 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담당부서의 장, 조사담당부서의 장과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구성하며, 심의를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하여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도지사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행위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도지사의 관할로 하고, 이후의 조치도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